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남 시 욱(언론인 ·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

건국 60주년을 맞아 제기된 근원적인 의문들

2008년 6월은 초여름답지 않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한 달이었다. 그것은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이룩해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이 하필이면 건국60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계기로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촛불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첩된 위기상황에 직면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촛불시위로 인해 취임한지 1백여일 밖에 안 된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수석비서진을 총사퇴시키고도 일부 세력으로부터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 앞에서 엄청난 허탈감과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이나 사과연설을 하고 촛불의 거리를 '희망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치정국이 조기 수습되지 않고 있다. 만약 대치정국이 조속히 수습되지 않고 만성적 정치불안에 빠질 경우 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두 달 동안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이를 계기로 일부세력이 벌인 폭력시위사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주소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최근의 사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부시와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위해 졸속하게 추진한 협상결과는 새 정부의 상황판단력과 외교를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관리 능력의 결여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손상과 권위의 추락으로 인한 리더십위기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맞본 실망과 좌절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처음에는 순수한 광우병 공포심에서 발단되었다고는 하나, 군중심리적인 전개양상 및 시위목적과 시위방식의 변질과정에서 드러난 정치문화는 사물의 판단에 있어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남미형과 유사한 느낌을 주었다. 촛불시위가 거듭되면서 터져 나온 일부 데모참가자들의 이명박퇴진 요구와 청와대로의 가두행진 시도, 그리고 우파 언론사에 대한 폭력행위와 광고주 위협행위는 민주국가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 역시 미국산 쇠고기문제를 빌미로 마치 대선과 총선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총반격작전이라도 퍼듯이 국회개원을 거부하고 촛불시위에 합류한 것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초라한 현황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른바 숙의민주주의의 길은 멀게만 보였다. 촛불시위 기간 중 드러난 야당수뇌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양식은 이 나라에 과연 진정한 정치지도자가 있는지조차 의심을 품게 했다. 명색이 60년의 헌정사를 가진 나라의 정치수준이 이 정도라면 우리 정치에 과연 미래가 있는지, 근원적인 의문을 던졌다.

촛불시위과정에서 드러난 정당정치의 위기는 따지고 보면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 들어 더욱 심화된 것이다. 노무현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새천년민주당을 박차고 나가 열린우리당을 창당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무력화하더니 결국 신당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해체되어 '도로민주당' 이 되고 말았다. 작년 대선 때는 후보 숫자만큼 많은 정당들이 급조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총선을 맞아 여야 할 것 없이 비민주적인 하향식 후보공천을 완벽하게 실시함으로써 정당정치의 원칙이 철저히 유린되었다.

이번 촛불시위에서 한국의 언론, 그 중에서도 방송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촛불시위가 일어나게 하는데 특히 결정적 역할을 한 KBS와 MBC, 두 공중파방송의 보도행태, 즉 기사의 부정확성과 편파성, 그리고 선동성은 한국의 저널리즘, 특히 방송저널리즘이 아직도 개도국 시대의 정파언론 수준을 넘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물론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히 이명박 정부의 명백한 실책이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현재 3억 미국 국민들이 상용하고 있는 육류이며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소 광우병 발생은 없었다. 그동안 19만 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리고 163명의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린 영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2003년까지 불과 3마리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중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들어온 것이어서 두 마리만 미국 내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7년 동물성사료를 금지한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이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3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견되었지만 이들 중 2명은 영국에서, 1명은 사우디에서 각각 감염된 후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미국 소의 광우병 발병 가능

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방송보도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광우병 우려만을 집중보도함으로써 순진한 10대 학생들과 가정주부들까지 거리로 내 몰았다. 문제는 방송보도들의 부정확성이나 편파성만에만 있지 않다. 이들 방송사들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무현코드 인사들과 노조에 장악된 채 새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앞장섰다. 이명박 정부는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정권출범 1백일이 지나도록 특히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지 못함으로써 과거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던 공영방송이 정부를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한국 방송사상 전례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촛불시위의 진정한 원인들

촛불시위에 그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온 데는 방송의 선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일찍 정보화시대를 맞아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인터넷과 그 영향력 아래 있는 10대 청소년층의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이 절대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른바 ‘디지털 포퓰리즘’이라 불리는 일부 인터넷매체의 광우병에 관한 과장된 보도 행태는 청소년들을 감성적으로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학교급식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먹거리에 인간 광우병 발병요인이 내포될 위험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들은 안 그래도 외국산 보다는 한국산 쇠고기가 든 햄버거를 선호하는 판이었다. 이런 젊은 세대의 심리상태와 미국산 쇠고기를 ‘광

우병 쇠고기' 라고 과장하고 선동한 일부 인터넷매체의 과장보도는 아주 절묘한 배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기는 하나 촛불시위의 진정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누적된 국민들의 불만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실수를 하다가 출범 때는 '강부자내각' '고소영청와대' 라는 비난의 대상이 된 인사실수 때문에 국민들은 실망했다. 거기다가 총선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박근혜 계열을 견제하고 이명박 계열 중심으로 후보를 공천한 결과 당내에 공천파동이 일면서 집권당의 이미지가 여지없이 실추했다. 총선결과는 한나라당이 겨우 과반수인 153석 획득에 머문데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 국민들의 불만에는 민생고도 큰 작용을 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심각해진 경제침체로 생겨난 대량 실업자들, 특히 젊은 '백수들' 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최근의 원유가 및 환율 상승에 의한 물가폭등으로 빚어진 물가고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촛불시위와 때를 맞추어 단행된 화물연대와 민노총 등의 연쇄파업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불만세력은 이들 뿐 아니다. 촛불시위 배경에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보수세력이 지배하는 정치상황에 저항하고 이를 반전시켜보려는 진보좌파세력이 있다. 이들은 지난 번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해 심한 좌절감을 빠져있었다. 다음 글은 모 진보계의 웹진에 실린 어느 작가의 6월 13일자 글 중 한 대목이다.

한국 민주주의에 절망하던 날, 아니 김근태가 신지호에게 패하던 날, 세상인지 역사인지로 부터 받은 타격을 견딜 수 없었다.

마치 1980년 5월 전남도청 진압 직후의 공황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았다. 저 참혹한 깃더미 속에 불씨 같은 게 남아 있을까? 더 불어 아쉬워하고 더 불어 슬퍼할 체온을 만날 수 있을까? 온라인에 미숙한 몸을 끌고 낯설고 삭막한 포털사이트들을 돌았다. 조회수 300개 이상을 1박 2일에 걸쳐 클릭하는 미친 방황이었다. 혹시, 다시 혹시……그러면서 다다른 토론방에서 아직 기세가 살아 있는 네티즌의 집결을 촉구하는 손짓을 보았다. “아고라로 모이자!” 다른 사이트에서 옮겨오는(택시 기사도 모르게) 무리들 중에는 진보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통합민주당 등이 있었고, 간혹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도 없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승리한 4·9총선 결과에 절망했던 이 글 집필자는 미국산 쇠고기문제로 촛불시위가 시작되자 자신의 표현대로 인터넷을 ‘미친 듯이’ 서핑한 끝에 촛불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많은 글을 읽고 새로운 용기를 얻은 것 같다. 촛불시위는 이 같은 반한나라당·반이명박 기류 속에서 정치적으로 변해 간 것이다. 소위 광우병쇠고기 대책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내건 개혁정책, 즉 공기업민영화 교육개혁 공영방송개혁 수도권영화 대운하 반대 등 5대 과제, 즉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가 마지막에는 이명박 퇴진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들은 촛불시위에서 ‘이명박 OUT’를 내걸었지만 사실은 당초부터 ‘이명박 NO’였던 것이다. 이들 뿐 아니라 촛불시위를 줄기차게 선동해온 또 다른 그룹, 즉 친북반미단체들의 역할은 더욱 크다. 이들은 정부퇴진에 그치지 않고 체제전복을 노리는 세력들이다. 이들

반미친북세력들은 과거 평택미군기지 발대운동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운동을 주도한 그룹들이다. 물론 이들 반정부·반국가세력의 배후에는 북한정권이 있다. 이상의 연합세력들은 새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쇠고기정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사태가 언제 수습될지 그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혹한 국제적 생존조건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이제 미국과의 추가협상 타결을 바탕으로 인사쇄신을 통한 재출발과 질서회복 이외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다행히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협조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까지 합세한 거리의 시위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실력으로 저지하려 하면서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쇠고기사태는 경제대란과 함께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장기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 1987년의 6월민주항쟁은 민주화라는 역사발전을 가져왔으나 20년이 지난 2008년의 촛불시위는 그 민주화가 원숙한 대의민주주의 대신 무책임한 정지지도자들에 의해 인기위주의 민중주의와 폭민주의로 줄달음 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에서는 ‘위대한 직접민주주의’라고 찬양했지만 촛불시위로 인해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는 무력화되고 말았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가 선진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

는 정당정치적 복원이다. 정당정치적 복원 없이는 원숙한 의회민주정치와 대의민주주의는 꽃필 수가 없다. 또한 5년이라는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와 같은 변화무쌍한 21세기에는 지나치게 긴 기간이다. 그런 점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환원과 내각책임제의 조심스러운 검토를 비롯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가 왔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안보외교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라는 선거공약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출범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화해 개방을 하는 경우 북한경제를 향후 10년 안에 1인당 소득 3천 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대북경협을 하겠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마치 '7·4·7계획'이라는 그의 경제살리기 및 선진화정책이 최근의 세계경제의 난조 때문에 역풍을 맞은 것처럼 그의 '비핵·개방·3000' 정책 역시 북한정권의 반발과 국내 친북좌파들의 방해로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 북한당국이 전 세계가 주시한 가운데 핵개발의 상징이었던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6자회담의 밝은 전망이 일고 있지만 아직은 차분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68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0kg를 생산한 것이 밝혀졌으나 이를 검증만 하는 데도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북핵과 함께 동북아안보도 문제이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원이 실패에 돌아간 다음 이명박은 한미동맹 복원과 대중국 실용외교를 그의 외교정책의 기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원론수준이다.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6자회담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기구를 제도화하는 이른바 '동북아 안보포럼'의 첫 단계가 될 것이

라고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장래는 김정일의 근본적인 노선변화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낙관만은 할 수가 없다.

촛불시위사태와 때를 같이 해서 불어 닥친 이번 제3차 석유쇼크는 대한민국의 장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번의 유가폭등사태는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는 조건이 너무도 취약하고 척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최근 일어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 폭등은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세계경제 위기라 할 것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피해 국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다. 물가 투자 성장 국제수지 모두가 뒤틀려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실업이 급증해서 국민들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 버금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고유가의 여파로 원재료 물가 상승률이 이 분야 통계지표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후 28년만의 최고치인 79.8%를 기록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만해도 2007년 5월 현재 64.7달러였던 현물가격이 1년 만에 119.5달러로 폭등, 84.7%의 급등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6월 말 현재 140달러를 돌파한 원유가는 금년 하반기에는 2백달러, 내년에는 250달러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세계 제16위의 에너지소비국이자 4대 원유수입국인 한국은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에 너무도 취약하다. 만약 원유가가 폭등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가 입을 타격은 엄청나게 클 것이며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도전에 대비할 것인가. 우리는 하루 빨리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외교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원유가가 계속 폭등하고 세계의 석유자원이 점차 고갈되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세계의 에너지수요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50% 증가한 164억 8,7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230여 개국 중 산유국은 104국인데 한국은 불행하게도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비산유국으로 에너지의 자주개발비율은 4%에 불과하다. 자연자원이 없는 한국의 활로는 지식기반산업에 있다. 지식기반산업을 발달시키려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의 획기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의 산출물인 첨단제품을 전 세계에 팔려면 이번 미국산 쇠고기파동과 같은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과감한 세계화정책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국제경쟁력 향상과 세계를 자유로운 시장으로 만들 여러 가지 세계화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력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경제상황도 그렇지만 눈을 크게 뜨고 앞날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걱정거리이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16~17년 경부터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 내지 2024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일본의 모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40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

률은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 성장을 멈추고 노인부양비율은 세계 제3위에 이르러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 한다. 이에 따라 KDI 추정에 의하면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재대로 두면 국민연금은 2040년 경부터는 적자를 기록하고 2060년에는 고갈되어 그동안 연금을 불입한 사람이 사실상 빈부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표된 정부의 국가발전중장기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7·4·7계획'이 있다. 그 골자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평균 7%의 경제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총생산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7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10년을 목표로 했으므로 2018년까지의 중기계획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가 종래 발표한 국정철학인 '신발전체제론'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아직은 구상단계라 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현대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식사회학자 칼 만하임은 "자유, 권력, 민주적 계획"(Freedom, Power, Democratic Planning)을,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자유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Freedom)이라는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통찰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자문기구로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안병만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를 발족시켰는데 이 위원회는 건국60년을 맞는 8월 15일 '선진한국 종합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계획'도 보완 또는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월에는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과 고축통 싱가포르 선임장관, 기 소르망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교수 등 세계적 저명인사 15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국제자문단을 발족시켰다. 이 기구도 미래기획위원회와 함께

한국의 미래 비전에 관해 정부의 자문에 응할 예정이다. 이제 두 자문 기구는 유기적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과 복지와 통일의 실현, 과학과 문화의 발달,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 방안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입안한 한반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훌륭한 미래계획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